

# 李-朴 '검증 공방' 여권까지 가세

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거센 검증 공세가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전 시장을 상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운용회사 BBK 문제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격했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전남 한나라당 검증위에 의뢰된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양 측간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다.

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이 전 시장

## 국회 교육·사회 대정부질문 우리당, 'BBK' '정수장학회' 공격 전방위 압박

측근인) 김백준씨는 서울메트로 감사로 2004년 10월7일 임명됐지만 김씨가 LK-e뱅크 이사로 임명된 것은 2004년 10월 29일"이라며 "관련 법규에는 시장의 허가없이 공사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는데 이 전 시장이 겸직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와 LK-e뱅크 이사로 겸직하도록 한 것은 범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음서넬벤처스 주가조작은 김경준씨가 이 전 시장과 결별한 이후 발생

했다고 이 전 시장측은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이 전 시장이) LK-e뱅크 대표를 시작한 것은 2001년4월18일이지만 검찰 수사기록에는 2000년12월11일부터 LK-e뱅크와 BBK 사무실로 사용된 삼성증권 빌딩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돼있다"고 지적하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장관은 "기록에는 (주가조작 시점) 2001년12월부터로 돼있다. 밝혀진 건 2002년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김경준씨에 대한) 기소중지

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박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의 전신)의 토지와 부일장학회를 세운 김지태씨의 언론3사 주식을 강탈한 경우가 언론단입"이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전두환 집권 당시 부산일보가 국제신문을 통해합할 자금이 모자라자 장학회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통해합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수장학회(장학금을 받은)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회원이 3만여명인 삼정회는 다양한 행사로 결속을 다지고 있다. 이는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수장학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과거사위가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기구고 조사 내용이 일선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를 (강제 취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장과 시각

### 시행착오, 언제까지 할텐가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시가 전임 시장 시절 체결한 협약 때문에 특별히 대가를 치르고 있다. 통행료 수익으로 충분히 건설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을 먼저 끌어들이 건설한 제2순환도로가 매년 160억원의 혈세를 잡아먹는 '괴물'이 된 때문이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간구간(1구간 두암IC~

소태IC 4.2km·3-1구간 효천IC~포암IC 2.5km)의 협약과 관련 외국계 투자사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자회사'와 재협상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6월 부터였다.

송인중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1997년 민자료를 유지한 1구간이나, 고재유 시장 시절인 지난 2001년 협약체결한 3-1구간 모두 1987년 당시에 추계한 인구를 기준으로 통행료를 추정했다. 하지만 3-1구간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예상통행량의 39.7%, 예상 수입액의 37.0%에 머물렀다.

통행료 수입이 적으면 시가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이 수입보장 조건 협약에 따르면 1구간은 앞으로 21년 동안 810억원, 3-1구간은 27년간 무려 6천850억원의 적자를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는 협약내용을 바꾸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4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투자사는 '수입보장 조건을 완화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매도하라'는 광주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하는 수 없이 8월까지 3-1구간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과장은 컸다. 투자사인 맥쿼리측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외자유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도 곤란해했다. 최소 2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지루한 법정공방에 따른 관리부실 우려도 제기됐다. 다행히 기획예산처가 중재를 나서면서 '재협상'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약속' 파기에 따른 광주의 대외 이미지 훼손은 상처로 남게 됐다.

이처럼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대가를 특별히 치르는 사례는 더 있다. 부실시공과 특색 없는 디자인 때문에 재시공하기로 한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박광대 시장이 완공 전에 현장을 점검한 뒤 재시공토록 지시해 바로 잡았기에 망정이지, 그냥 뒀더라면 두고 두고 입찰에 오를 뻔 했다.

수요 예측 잘못과 교통체증 등이 겹치면서 공사를 중단한 '서방지하상가', 16억원을 들였다가 원금마저 날릴 위기인 '광주 영산드라마센터' 등도 단체장의 업적 제일주의와 일부 주인의 이기주의가 합작한 민선시대의 '재앙'이다.

몇 번의 실패가 더 있어야,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최소한 후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결정만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jjnews@kwangju.co.kr

## 지방 의원들도 복지카드 받았다

### 행·의정감시전남연대, 발급 현황 공개... 선심성 논란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 대상에 지방의원까지 포함시켜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의정감시전남연대는 13일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집계한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 도내 23개 자치단체의 복지카드 발급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역4천만원 등 자치단체 평균 6억9천6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카드를 발급한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에게도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51명의 의원들에게 평균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단체보험도 가입해 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강진과 고흥, 곡성, 완도, 진도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18개 자치단체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공무원들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점수는 평균 700점(1점당 1천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5개 구청은 올해부터 복지카드를 도입했고 광주시와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단체가 의원들에게도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전남연대 이상석 공동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달라고 뽑아준 선출직 의원들이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자진 반납으로 의원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은 전남도가 28억2천만원, 목포시 10억2천만원, 무안군 2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한국형 잠수함 2호 '정지함' 진수

(1347~1391) 장군의 이름을 따 두 번째 214급 잠수함 명칭을 정지함으로 결정했으며 시운전을 거쳐 2008년 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대양해군의 핵심전력인 1천800t급(214급·KSS-III) 잠수함인 '정지함'이 13일 오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진수됐다. 해군은 고려시대 왜적을 격파한 정지

## 공교육 무시 초강력 카드로 응수

### 교육부, '내신 무시' 사립대 '예산 지원 전면 중단'

주요 사립대들의 대입 정시모집 내신 반영률 문제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질 조짐이다.

이번에는 주요 일부 사립대의 내신 반영률 축소 방침이 불거져 정부가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드는 사태를 맞고 있다.

대학들은 논술 비중을 강화하거나 내신 비중을 높이면 대입 선발 과정에서의 차별력을 갖추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대학들의 '내신 무시' 방

침이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정책에 정면 위배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교협은 주요 사립대 등의 '내신 실질 반영률' 조사를 벌여왔고 교육부는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례없이 이를 공개하면서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 등의 내신 반영률 문제가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재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공개했다.

특히 교육부 내부에서 사립대의 내신 반영률 축소 방침에 대한 비난 발언이 쏟아졌고 발인 수위도 '무정부 교육 초래' '국민 우롱 처사' '공교육 파괴' 등 강도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내신 무시'는 곧 공교육에 대한 무시가자 도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교육 정책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주요 사립대들이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지, 교육부가 과연 제재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다시 불거진 '대입 갈등'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변 복지장관 내정자 부인 건보료 미납 논란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부인이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 납부했는지 건보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기록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며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6만2천

4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1995년 9월 4일 반환일시금으로 109만9천550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당시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변 내정자의 직장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52 호남예술제

1956-2007 제52회 호남예술제

### 제52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 및 시상식

\*일 시: 2007년 6월 29일 오후2시  
\*장 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삼성생명

후 원 | 문화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광주교육대학교·조선대학교·호남대학교·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초당대학교·광주여자대학교·남부대학교·예총광주시연합회·예총전남도연합회

특별후원 | 대구문화재단

## 새싹 그리기 축제

- 심사방식
  - 공모에 의한 작품 접수 후 심사
- 시 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일정 및 요강
  - 대 상: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응모기간: 2007년 6월 1일(금)~6월 19일(화)
  - 결과발표: 2007년 7월 3일(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발표
  - 작품크기는 8절이며 주제는 제한 없음
  - 접수방법: (1)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2) 문의: (062) 220-0541
  - 참가비: 개인당 5,000원 (20명 이상 단체서 할인)

※ 공모시 화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